

[국제]

■ **北·美 관계정상화 뉴욕회담 개막**

北 ‘체제 고수·경제발전’ 숙원 풀릴까

北, 핵능력 양도·인권상황 개선이 핵심 열쇠

북한과 미국이 5일부터 '2·13합의'에 따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 역사적인 수교 논의의 첫 걸음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북미 관계정상화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김정일 체제를 지키며 국제무대에 정상국가로 진입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체제와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오랜 숙원이었다. 체제 고수과 경제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 외교과제가 자 국가목표인 셈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북미 관계정상화에 목을 매고 그 실현에 안간힘을 썼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양국은 1993년 1차 핵위기 이후 15년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 등을 수 차례 채택했지만 전부 휴

지조각에 그치고 말았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북한이 나와서 '미국이 적대정책을 갖고 있고 약속한대로(금융) 제재를 해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북한이 테러·위조지폐 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함으로써 그 결과로 제재 해제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라고 전망했다.

북미 양쪽 모두 상대방에 대한 약속이 충족되는 대가로 더 단단한 보장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은 마카오 BDA 은행의 북한자금 2천400만달러 동결건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해제된 자금은 아직까지 없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문제에서도 양국의 입장이 충돌할 여지가 있

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게 미국에 대한 일본의 주문이었기 때문이다.

찰스 카트먼 전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는 이 문제와 관련, '해묵은 범죄'이기 때문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는 것은 쉬운 것이라면서 "그들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묶어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너무 많은 원조, 금융제재 해제, (체제)인정 등을 허용하는 데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더구나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돼야 수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유일한 협상카드인 '핵능력'을 양도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잘 풀리면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 반대라면 양국의 감경론자들에게 발미만 재공해 외교노력을 어려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연합뉴스



4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을 전격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류샤오밍 중국 대사와 건배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류 대사의 초청에 따라 북·중 양국의 민족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이뤄졌으며 류 대사는 김 위원장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다. /평안신문=연합뉴스

핵실험후 양국 관계 복원 과시

■ **김정일 中 대사관 전격 방문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중국 대사관을 전격적으로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4일 고위간부들을 대동하고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했다고 5일 새벽 보도했다.

후진타오 구두친서도 받아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류샤오밍 중국 대사와 대화를 나눴으며 류 대사는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사관이 외교적으로 치외법권이 적용되

는 '중국의 영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한 것과 맞먹는 외교·정치적 행위를 한 셈이다.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대사관 방문은 북중관계에 대한 북한 최고지도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의 통환 속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됐고 중국은 단둥(丹東)지역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일부 은행들은 대북송금을 중단하기도 하면서 양국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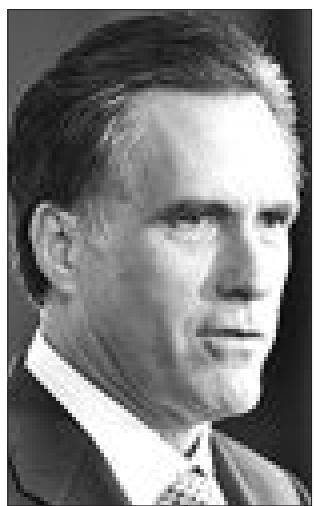
따라서 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대사관 방문을 통해 작년 7월 이전 수준으로 양국관계를 끌어올리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제20차 남북장관회담을 거쳐

남북관계까지 복원되고 있고 북·미 관계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의 가동은 앞둔 상황에서 중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못박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더불어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대사관 방문을 통해 중국의 외교적 중재 노력에 대한 사의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중재'에 감사 표명

한편 김 위원장의 중국 대사관 방문에는 북한의 외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국방위원회에서 외교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양건 참사가 포함돼 있어 현재 6자회담 진행상황과 북한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롬니·힐러리, 양당 대통령 후보 1위

〈공화〉 〈민주〉

힐러리 클린턴(뉴욕) 상원의원과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서 뽑는 대통령 후보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특히 롬니 후보는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차총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수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력한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힐러리 의원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386명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위원 중 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도 조사에서 20%의 지지도를 확보, 15%를 기록한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을 크게 앞질렀다.

롬니 전 주지사는 CPAC 연차총회 참석자 1천705명을 대상으로 "2008년 대선 후보로 적임자가 누구냐"고 묻는 설문에서 21%의 지지로 수위를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힐러리 상원의원〉

아베 또 망언 "위안부 결의안 가결해도 사죄 않겠다"

"강제성 없었다" 주장 되풀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5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의결이 되더라도 내가 사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민주당 오가와 도시오 의원의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이뤄진 증언 중 어떤 것도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구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하는데 개입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발언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런 발언은 취임 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한 1993년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던 그의 지난해 국회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기본적으로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또 "협의를 의미로서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었다. 관한 이 사람들을 납치해 데려가는 강제성은 없었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증언도 없다"고 구 일본군과 관청에 의한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일본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이런 일련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의 역사에 대한 인식에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도쿄=연합뉴스

'부시에 전정 권한' 2002 결의안 美 민주 "이번주내 개정"

미국 상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전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라크 침공의 길을 열어준 2002년 의회 결의안을 이번 주 안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상원 군사위원회 칼 레빈 위원장이 4일 밝혔다.

민주당의 레빈 위원장은 이날 CBS의 '페이스 더 내이션' 프로에 출연해 이 조치는 2002년 전쟁 결의안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레빈의 임무를 이라크 공격 보호 같은 대 테러 활동에 집중하도록 제한하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군의 임무는 바그다드 한 가운데서 벌어지는 전투가 아니라 이라크 군대 훈련 및 전술 지원 등 훨씬 제한적인 역할로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원은 이번 주 안으로 전쟁결의안 수정을 마무리할 것이며 이는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연합뉴스

中 대륙에도 '섹슈얼 혁명?'

지난주 중국에서 미국 잡지 스포츠 일러스테이션의 수영복 특집판이 처음 열린 2002년 의회 결의안을 이번 주 안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상원 군사위원회 칼 레빈 위원장이 4일 밝혔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남성잡지 '포 힘 매거진'은 2월호에서 '입은 것도 아니고 손이 땀도 아닌' 옷차림을 한 인기가 수 '아 듀오'의 사진들을 독자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헤럴드 트리븐은 5일자에서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들며 정부의 매체에 대한 통제가 여전히 특히 도색 매체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중국 사회에서 '섹스 어필' 이미지들이 점점 주류 매체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5년 전

에만 해도 노출이 심해 보이는 모델의 사진이 들어간 매체들은 여지없이 검열관의 가위질을 당해야 했으며 공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예술작품'이나 성교육 서적에서만 '벗은 몸'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팔리는 남성잡지에도 '5분 안에 끝내는 방법' 같은 기사가 실리는 '섹슈얼 혁명'이 벌어진 것. 한술 더떠서 중국 웹사이트들에서는 '야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시민 개개인에 대한 정부 통제가 완화되면서 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의 이미지가 점점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이 등장하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 products, including '드림특수방수제' (Dream Special Waterproofing) and '드림코리아' (Dream Korea). The ad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and lists various waterproofing services and products.

Advertisement for '상부대학직업전문학교' (Sangbu University Career Specialized School). The ad lists various courses and programs, including '전액 국비지원 교육생모집' (Full Government Support Education Student Recruitment) and '정부위탁훈련(1년)' (Government Entrusted Training (1 Year)).